

#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요인의 적합성분석

: 경쟁가설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비교를 중심으로\*

Analysis of Competing Hypothesis on Local Government and  
Administrative Services in Community Well-being(CWB)

김 태 훈\*\* · 서 인 석\*\*\* · 기 영 화\*\*\*\*

Kim, Taehoon · Seo, InSeok · Kee, Youngwha

## Ⅰ 목 차 Ⅰ

- I. 문제의 제기
- II. 이론적 검토
- III. 연구설계
- IV. 분석결과 논의
-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방행정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과 개념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관점과 커뮤니티웰빙은 이론적으로 6가지 자본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 사이에서 지방행정서비스는 어떤 구성요소의 하위요소로 고려되어야 할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출발하였다. 즉, 잘 구현된 지방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며, 지방정부 선호도를 높이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평가요소로서 커뮤니티웰빙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13S1A3A2054622).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기획부장(주저자)

\*\*\* 송실대학교 SSK 커뮤니티웰빙 사업단 전문연구원(공동저자)

\*\*\*\*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4. 4. 28, 심사기간(1차): 2014. 4. 28 ~ 5. 21, 게재확정일: 2014. 5. 21

분석결과 우선, 경쟁가설로 제시한 인프라자본의 하위요소(H1), 사회자본의 하위요소(H2), 인적자본의 하위요소(H3), 커뮤니티웰빙의 다른 평가요소(H4) 중에서 H4 가설이 모형적합도에서 가장 우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역민의 건강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관계 회복과 지역회복을 위해 지방행정서비스가 노력할지라도 지방행정서비스는 단순히 이들의 하위요소라기 보다는 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체로서 또 다른 하나의 평가요소로 바라봐야 한다.

다음으로, 커뮤니티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6가지 자본요인과 지방행정서비스 요인의 하위지표들은 대부분 적합한 수준이었다. 물론, 6가지 자본요인과 지방행정서비스를 합한 7가지 평가요소 간에도 부합도의 차이가 나타나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는 있기에 이들 간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향후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 경쟁가설모형, 고차요인분석

A location of the public service of local government in CWB(Community Wellbeing) conception's research discussion gives a complexities of which to sub-categorization in six capital factors or to other factor(7th factor). That is, the well-structured public services assigns the positive images to local citizens, and local citizens evaluate local service and local government to better. Therefore, harmonizing local services with CWB is very important.

Upon the employment of the higher-order factors analysis, the result shows H4 is the best for competing hypothesis, which is the sub-elements of infra-structural capitals(H1), social capitals(H2), human capitals(H3), and the other factor of community wellbeing(H4).

□ Keywords: Evaluation indicators of Community Wellbeing, 6 Capital Competing Hypothesis, Higher Factor Analysis

## I . 문제의 제기

지방정부의 정책과 공공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을 결정하고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48). 이는 지방정부의 가치가 '주민의 복리'를 높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36). 즉,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의 결정요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또

는 지방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그 중요성이 인지되고 부각된다. 따라서, 잘 구현된 지방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며, 지방정부 선호도를 높이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의 하위개념은 아닐지라도 평가에 요소로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평가요소로서 커뮤니티웰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한편, 커뮤니티웰빙의 이론적 체계성을 지적하고 체계화된 논의를 위해 Kee et al.(2014)은 자원(Resource)의 관점과 자본(Capital)의 관점을 활용하여 6개영역으로 커뮤니티웰빙 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를 인적자원(Human Resource), 사회적자원(Social Resource),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의 3개의 자원(Resource)으로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인적자본(Human capital),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문화적자본(Cultural capital), 인프라자본(Infra-structural capital), 자연자본(Natural Resource) 등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으로 복합적이며, 체계적인 구분은 커뮤니티웰빙을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인은 이론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 및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평가지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체계적인 평가틀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가 그 요소로는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 사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해소하고 지역역량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그간의 연구들(권경득, 1998; 최병대, 2001; 이중화; 2003)은 이를 평가지표로 고려하여왔다. 또한, 각각의 관점에서 때로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평가요소로, 때로는 지역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지역사회의 자본으로<sup>1)</sup>, 또 때로는 도시계획학에 지역사회개발을 도시개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구자들이 인식할 때는 지역사회인프라의 핵심요소로 바라볼 수도 있다. 결국, 지방행정서비스가 커뮤니티웰빙 평가모형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유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각 관점에서 평가요소로 간주하는 지방행정서비스의 적합한 위치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커뮤니티웰빙이라는 커다란 평가개념에서 지방행정서비스 평가요소를 위치시킨 구조적 모형들을 구성한다. 이들을 각 경쟁가설로 인식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적합도를 토대로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고, 이때 커뮤니티웰빙에서 차지하는 지방행정서비스의 부합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에 이론적 검토부분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

1) Putnam은 이탈리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협력하려는 태도나 관계'가 실제 지방정부성과에 차이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관계를 지역사회자본으로 언급한 바 있다.

로 구성한다. 한 부분은 평가요소로서의 커뮤니티웰빙의 이론모형이며, 다른 한 부분은 평가요소로서의 지방행정서비스 위치에 대한 각 관점들을 다룬 내용이 된다. 이와 같은 논의 후 각 경쟁모형들을 분석하고 가장 모형적합도가 높은 것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커뮤니티웰빙과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검토

### 1. 지역평가분석틀로서 커뮤니티웰빙: CWB모형(Kee et al., 2014)을 통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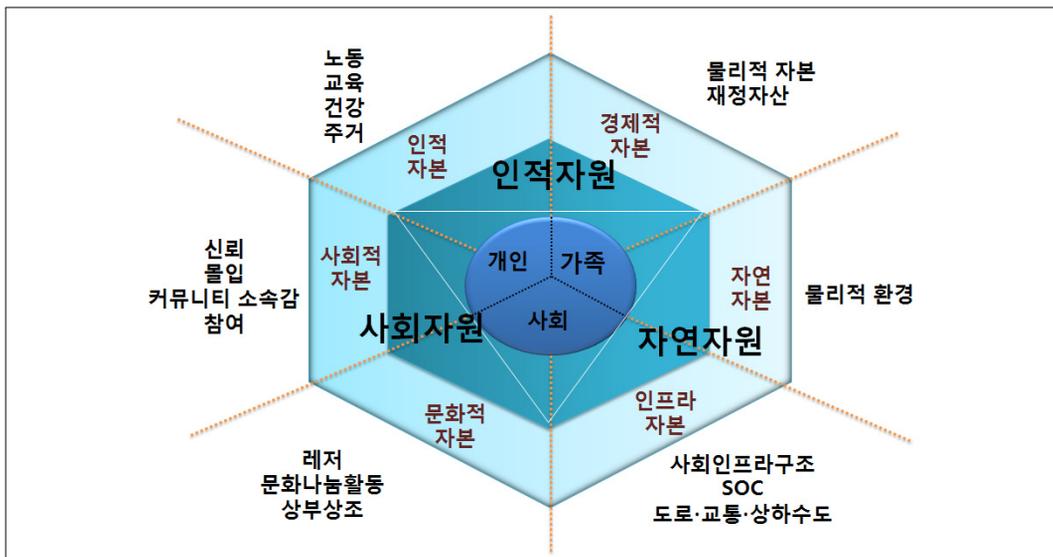
기영화 외(2013: 2)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외, 차별, 불평등이라는 사회문제가 병존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행복, 복지, 삶의 질과 같은 개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지역사회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주민의 행복이나 웰빙 증진을 목표로 하면서 지역사회 또는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지방정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커뮤니티단위의 웰빙인 커뮤니티웰빙을 측정하는 것은 단순히 현재상황에 대한 평가 차원을 넘어서 미래상황에서 포함해야하는 가치와 목표를 수반하게 된다. 게다가, 커뮤니티웰빙 평가는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관계를 맺는 데 구체적인 초점을 두고 있기에 지역사회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핵심 동향, 우선사항,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기영화 외, 2013: 3).

그렇지만, 상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웰빙 개념은 복잡하고 다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웰빙은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요소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심리적 차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또는 그 사회의 참여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심리적 차이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살기 좋은 공간이나 지역의 기술인프라 수준은 사람들의 활동과 삶의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가 커뮤니티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고민해야하는 가치는 인간의 관계에서의 만족과 발전가능성을 의미하는 사회적 웰빙, 경제적 영역에서의 경제적 웰빙, 주거환경 및 자연환경에서의 웰빙,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웰빙 등의(서재호 외, 2012: 44) 다양한 차원을 포괄한다. 나아가, 이러한 다차원성을 포괄하여 제시한 Kee et al.(2014) 모형은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인

의 이론적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 및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 평가지표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커뮤니티웰빙 평가틀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커뮤니티웰빙의 다층수준을 고려하여 체계화한 Kee et al.(2014) 모형은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인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커뮤니티웰빙의 세부구성요소를 제시하기 위해 3개의 자원(Resource)에 기초하였다. 3개의 자원은 인적자원(Human Resource), 사회적자원(Social Resource), 자연자원(Natural Resource)으로 개인, 사회, 환경의 3가지 차원을 의미한다. 이때 이들 각각에 기초하여 각기 2가지의 자본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즉, 인적자원에 기초하여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도출하였고, 사회적자원에 기초하여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과 문화적자본(Cultural capital)을 도출하였으며, 자연자원에 기초하여 인프라자본(Infra-structural capital)과 자연자본(Natural Resource)으로 구체화하였다. 이와 같은 상이한 개념과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은 다차원적 접근(Multi-dimensional approach)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개념에는 개인(Individual), 가족(Family), 사회(Society)를 균형적으로 아우르고 있어 특정한 하나의 관점에 초점이 되어 논의가 이루어졌던 과거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대두되어 이슈화된 커뮤니티웰빙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그림 1> CWB의 다차원 모형(Multi-dimensional model)과 6개 구성요인



출처: Kee et al.(2014) 인용

한편, 커뮤니티 단위의 수준을 측정한다면 지방정부 서비스 영역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단위의 서비스 일부분을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평가하는 영역(삶의 질, 복지, 건강 등)에 따라서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평가대상으로 다루어왔다. 이러한 선별적 편익은 지방정부 공공서비스가 가진 전부분을 다루지 못하며, 이에 지방정부 공공서비스가 가진 영향력을 적실히 평가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가 가진 영향력과 관계성이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이하에서는 커뮤니티 웰빙과 지방정부 공공서비스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해본다.

## 2. 커뮤니티웰빙과 지방정부: 커뮤니티웰빙 증진의 독립변수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사회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제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만족까지를 포함한다(Kusel, 1991). 기영화 외(2013)에서 제시한 것처럼 커뮤니티웰빙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로 제안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사회 차원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웰빙의 영역은 교육·문화, 주민복지 및 사회·안전·환경 등을 포괄하여 기존의 경제적 영역이라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이 가진 물리적·정신적·개인적·사회적 조건을 모두 포괄하기 때문에 공동체 및 공동체 내 구성원의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에 지방정부는 커뮤니티웰빙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즉,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의 개념과 지표들은 종합적인 것이든 목록적인 것이든 간에 지방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이해하고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서재호 외, 2012: 48).

커뮤니티웰빙이 지역사회 운영의 지표가 됨과 동시에 이들을 통한 정책의 변화는 또 다시 커뮤니티웰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커뮤니티웰빙의 기본틀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참여 및 통합적인 공동체 계획과 정책결정을 위한 도구로(Cuthill, 2002), 지속가능한 공동체와 사회를 건강하게 구축하는 지향점이기에 지역사회는 커뮤니티웰빙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강화하게 된다.

서재호 외(2012: 48)은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공공서비스(정부요인)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인 정부영역에서, 공공서비스는 정부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포함하고, 다양한 정책의 형태

로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정부는 공공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통해 커뮤니티웰빙 수준을 좌우하며 지역사회의 다른 영역의 활동을 창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커뮤니티웰빙을 증진시킨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웰빙 향상(Veenhoven, 2004), 공공서비스전달 및 지방정책을 통해 지역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티 전체의 삶의 질과 웰빙 수준을 분석하여 지역주민의 만족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2)</sup>. 이는 결국 커뮤니티웰빙이라는 지방정부의 가치목표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지역주민 ‘삶의 질’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하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및 반응성을 중요한 요소로 부각시킨다(권경득, 1998: 71). 권경득(1998)은 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시청, 구청, 동사무소 등 일선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의 질과 효율적인 전달체계가 잘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정서비스가 잘 구현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치적 신뢰감 및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은 고양될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개선 및 개혁은 본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커뮤니티가 포함한 각종 문제들은 구성원들의 평가를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다. 즉,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는 커뮤니티의 주체인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삶의 질, 행복 등의 가치를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주민평가는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파악(Fitzgerald & Durant, 1980: 585)과 함께 주민의 입장에서 성과를 바라봄으로서 행정기관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최병대, 2001: 56).

2)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제성장효과와 더불어 소득재분배나 지출보조금의 방식으로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cully, 2001: 123).

### Ⅲ. 연구설계

#### 1. 연구기설 및 연구모형

지방행정서비스가 커뮤니티웰빙에서 제외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서재호 외, 2012)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또는 커뮤니티 수준을 평가하는 잣대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커뮤니티웰빙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될 수 있다고 볼 때 이를 독립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평가척도로 구성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행정서비스가 특정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에 일부분으로 보아 이를 평가척도로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있다. 우선, 지역인프라구성의 핵심평가지표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최근, 지역개발의 화두 중 한 가지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이다. 이는 대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 쇠퇴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도심 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고 재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강인호 외, 2013: 197). 특히, 쇠퇴하는 도시의 발전 동력으로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이 창조공간의 형성이다(Florida, 2002). 이때 창조공간의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지방정부 전략에 의존하게 된다. 즉, 도시재생전략을 위해 자분을 유치하고 유관 기업을 유인하며, 도시 생산성 제고의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에 의존하여 기업 및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정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창조계급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논의는 지역행정서비스가 지역인프라 구조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H1: 지방정부 평가요소로서 지방행정서비스는 인프라자본(Infra-Structure Capital)의 하위요소이다.*

둘째, 지방행정서비스를 사회자본의 구성지표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Putnam(1993)은 이탈리아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협력하려는 태도나 관계'가 실제 지방정부성과에 차이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지방정부와 시민들의 관계를 지역사회자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공무원들이 지역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 자분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촉매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Box(1998)의 시민통치에 대한 개념에서 잘 드러난다(최창수, 2000: 221). Box(1998: 19)는 시민통치를 시민, 선출직 공직자, 공무원들이 함께 지역사회를 통치해나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러한 시민통치가 진정한 의미의 시민자치정부(self-governance)를 향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Box(1998)는 사회자본이 사람들 간의 신뢰와 규범이라는 차원을 통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통치를 구성하는 기본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지방정부나 지역 공무원들의 제도 및 정책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독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방정부행정 및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 형성의 요소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H2: 지방정부 평가요소로서 지역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하위요소이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평가지표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Goldsmith S. and W. Eggers(2004: 7-8)는 20세기의 계층체적 형태를 가진 정부관료제는 공공서비스를 전달하고, 정책목표를 수행하는데 주도적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경향은 복지 및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경제성장에 초점을 두었던 과거 성장주의 지역개발과 맞물려 사회의 소외자 계층에 대한 형평적 대우 및 처우가 중요해지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지역사회들은 이러한 복지주의적 성향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복지혜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원해왔다. 나아가, 보건의료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명시함으로써(이화경, 2002: 5) 복지행정서비스가 지방정부행정의 필수적 과제임을 공시하였다(보건의료기본법). 최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지방행정서비스의 근간이 국민의 건강이며, 이것이 행복의 기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경우 교육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크게, 지속적인 교육체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결국 지방정부는 지역민들의 건강과 교육과 같은 인적자본에 가장 크게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방정부서비스는 인적자본의 일부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다.

*H3: 지방정부 평가요소로서 지역행정서비스는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하위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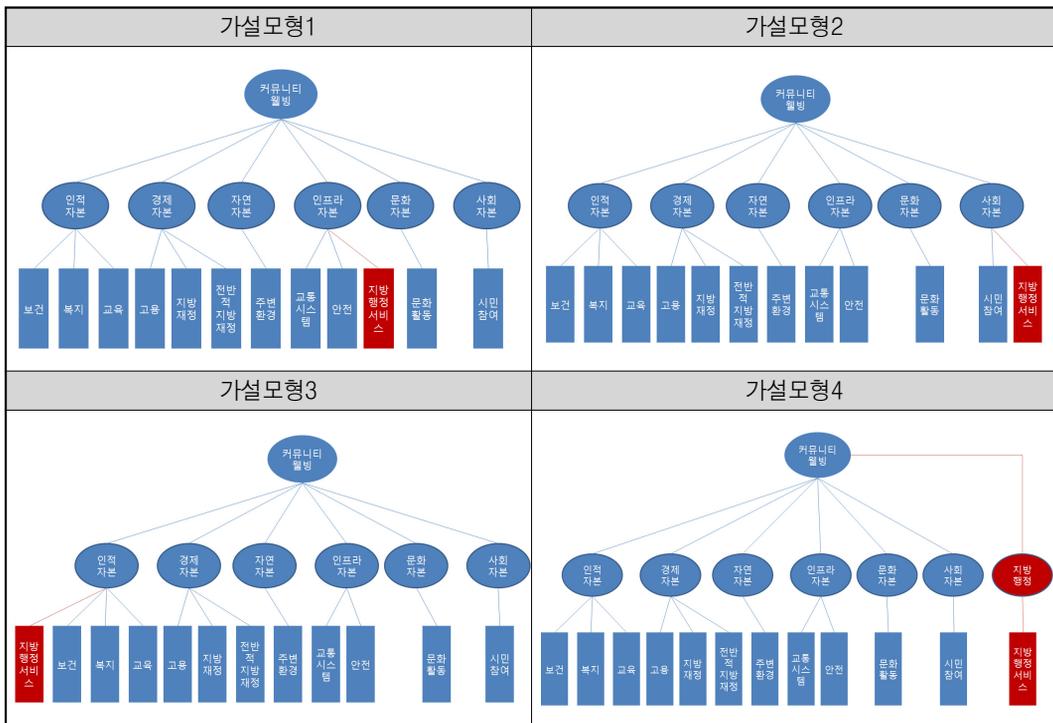
그렇지만, 상기의 관점들은 각각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한 측면이 있다. 하나의 관점에서는 지방행정서비스가 해당 논점을 가장 부각시키고 지원하는 지표로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지역민들의 민의를 해소하고 지역역량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때로는 지역정책을 진두지휘하는 주도자의 모습을 보일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간의 연구들(권경득, 1998; 최병대, 2001; 이중화; 2003)은 이를 평가지표로 고려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방행정서비스는 하나에

소속된 지표나 평가요소로 바라보기 보다는 커뮤니티웰빙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되어야 하나의 평가요소일 수도 있다.

H4: 지방정부 평가요소로서 지역행정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 평가의 다른 하위요소이다.

〈그림 2〉은 상기의 가설들을 각각 경쟁가설모형으로 제시한 연구모형이다. 가설모형1은 지방행정서비스를 인프라자본의 하위 평가요소로 간주한 것이다. 가설모형2는 지방행정서비스를 사회자본의 하위 평가요소로 간주한 것이다. 가설모형3은 지방행정서비스를 인적자본의 하위 평가요소로 간주한 것이다. 가설모형4는 지방행정서비스를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와 동등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간주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경쟁가설모형들에 대해 각각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적합도를 테스트 한 후 적합도가 낮은 세 모형을 기각한 후 각각되지 않은 모형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2〉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의 경쟁가설모형



## 2. 분석지표 및 자료

커뮤니티웰빙 지표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을 이용하여 고차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모수추정치 추정방식으로 최대우도추정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 MLE)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측정항목을 정리하면 <표 1>와 같다. 하위영역별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커뮤니티웰빙 영역 및 측정항목

최상위영역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측정항목
커뮤니티 웰빙 (CWB)	인적자원 (Human Resource)	인적자본 (Human Capital)	보건	c0101	지역건강상태 평가
				c0102	의료서비스 평가
			복지	c0601	노인서비스 평가
				c0602	장애인서비스 평가
				c0603	보육지원서비스 평가
				c0604	전반적 복지서비스 평가
			교육	c0501	공공도서관 평가
				c0502	평생교육서비스 평가
				c0503	교육환경 평가
		경제자본 (Economic Capital)	고용	c1001	직업훈련서비스 평가
				c1002	실업자 지원정책 평가
				c1003	개인 일자리 평가
			지방재정	c1101	재정 규모 평가
				c1102	예산 운용 평가
				c1103	납부세금 평가
	전반적 지방경제	c1201	전반적 경제적 상황 평가		
		c1202	지역 생활비 평가		
	자연자원 (Natural Resource)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주변환경	c0201	쓰레기처리 서비스 평가
				c0202	공기오염도 수준 평가
				c0203	공원·녹지 공간 평가
		인프라자본 (Infra-Stru ctural Capital)	교통 시스템	c0301	대중교통 평가
c0302				인터넷 서비스 평가	
c0303				도로 상태 평가	
안전		c0801	자연재해 안전 수준 평가		
		c0802	치안수준 평가		
		c0803	경찰인력 평가		

최상위영역	상위영역	하위영역	세부지표		측정항목
	사회자원 (Social Resource)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	문화활동	c0402	지역 문화예술활동 수준 평가
				c0403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평가
		사회자본 (Social Capital)	시민참여	c0901	지역사회활동 평가
				c0902	자원봉사활동 평가
	-	지방행정	지방행정서 비스	c0701	지역 공무원 업무처리 공정성 평가
				c0702	지역 공무원의 업무태도·서비스 평가
				c0703	전반적 공공서비스 평가

출처: Kee et al.(2014) 활용

우선, 인적자본에 포함되는 보건에는 지역건강상태, 의료서비스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고, 복지에는 노인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보육지원서비스, 전반적 복지서비스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교육에는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측정항목이 인적자본의 측정지표이다. 둘째, 경제자본에 포함되는 고용에는 직업훈련서비스, 실업자 지원정책, 개인일자리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지방재정에는 재정규모, 예산운용, 납부세금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전반적 지방경제에는 전반적 경제상황, 지역생활비를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측정항목이 경제자본의 측정지표이다. 셋째, 자연자본에 포함되는 주변환경에는 쓰레기처리서비스, 공기오염도, 공원·녹지공간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측정항목이 자연자본의 측정지표가 된다. 넷째, 인프라자본에 포함되는 교통시스템은 대중교통, 인터넷서비스, 도로상태가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안전에는 자연재해 안전수준, 치안수준, 경찰인력 등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측정항목들이 인프라자본의 측정지표가 된다. 다섯째, 문화자본에 포함되는 문화활동에는 지역문화 예술활동수준, 지역문화 예술활동지원 수준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측정항목이 문화자본의 측정지표가 된다. 여섯째, 사회자본에 포함되는 시민참여에는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활동이 측정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이 사회자본의 측정지표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서비스에는 지역공무원 업무처리 공정성, 지역공무원의 업무태도 및 서비스, 전반적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측정지표로 사용하였다.

&lt;표 2&gt; 응답자의 통계적 특성

인적요인	구성요소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393	39.2
	여성	589	58.8
연령	20대	203	20.2
	30대	230	22.9
	40대	212	21.1
	50대	168	16.7
	60대	110	11.0
	70대 이상	63	6.3
학력	고등학교 이하	310	31.8
	대학교	540	55.3
	대학원 이상	125	12.8
거주형태	자가	453	45.2
	전세	313	31.2
	월세	120	12.0
	공동주택	34	3.4
	기타	53	5.3
취업여부	비취업자	376	37.5
	취업자	583	58.2
결혼상태	미혼	314	31.3
	혼인	646	64.4
	이혼	14	1.4
거주기간	5년미만	274	27.4
	5년이상-10년미만	207	20.7
	10년이상-20년미만	221	22.1
	20년이상	266	26.6
소득	100만원미만	57	5.7
	100이상-200미만	119	11.9
	200이상-300미만	161	16.1
	300이상-400미만	189	18.9
	400이상-500미만	141	14.1
	500이상-600미만	103	10.3
	600이상	147	14.7

본 연구의 자료는 '2010 커뮤니티웰빙 SSK 사업단'에서 서울시 5개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3월초부터 2013년 4월말까지 이루어졌다. 총 설문응답수는 1002개였으며, <표 2>는 설문응답자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통계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거주형태, 취업여부, 결혼상태, 소득이 포함되었는데 이때 결측치는 성별이 20개, 연령이 17개, 학력 26개, 거주형태 30개, 취업여부 43개, 결혼상태 29개, 소득이 85개였다. 전체자료값이 1002개임을 고려한다면 결측값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성별의 경우 남성이 393명으로 39.2%의 비율을, 여성이 589명으로 58.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4대 6의 비중으로 균형적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연령의 경우 20대가 203명으로 20.2%를, 30대가 230명으로 22.9%를, 40대가 212명으로 21.1%를, 50대가 168명으로 16.7%를, 60대가 110명으로 11%를, 70대 이상이 63명으로 6.3%를 나타내고 있었다. 20대에서 40대까지가 6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조사된 것으로 이해된다. 셋째,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가 310명으로 31.8%를, 대학교가 540명으로 55.3%를, 대학원 이상이 125명으로 12.8%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대학교 인원이 상당히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넷째, 거주형태의 경우 자가 453명으로 45.2%, 전세가 313명으로 31.2%, 월세가 120명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자가 및 전세 인원이 전체의 대략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다섯째, 취업여부의 경우 취업자가 6대 4정도로 분포되어 있었다. 여섯째, 결혼상태의 경우 혼인상태가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30대 이상의 경우 결혼자가 많았다고 볼 때 나타나는 결과이다. 일곱째, 거주기간의 경우 5년미만이 274명으로 27.4%, 5년이상 10년미만이 207명으로 20.7%, 10년이상 20년미만이 221명으로 22.1%, 20년 이상이 266명으로 26.6%의 비중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소득의 경우 300만원이상에서 400만원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지만, 각 소득수준별로 분포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소득에 따라 균형있게 표집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었다.

### 3. 연구방법: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방법으로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고차요인분석(higher order factor analysis) 등의 통계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측정지표들에 대한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는 단일차원의 각 구성개념의 내용타당성, 구성개념타당성, 기준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지표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대표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측정도구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의미한다.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연구에 사용

된 이론적 구성개념(theoretical construct)과 이를 측정하는 측정도구들 간의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이홍재·차용진, 2008). 본 연구에서는 구성개념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구성개념의 단일차원에 대한 구성개념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는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사용하여 각 구성개념의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을 검증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개별 측정지표 구성의 최적 상태를 도출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chi^2$ 통계량,  $\chi^2$ 에 대한 p-값, 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잔차평균자승이중근(root mean square residual: RMR), 근사오차평균자승의 이중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적합지수(normed for index: NFI),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 같은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에 대한 측정이 미래시점에 있어서의 다른 속성이나 개념의 상태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기준타당성은 3개 구성요인과의 연관성을 검정하는 것이다. 이는 상관관계분석 결과가 유의한 경우 기준타당성을 만족한다고(Pedhazur & Schmelkin, 1991)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 IV. 분석결과 논의

###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가 각 요인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활용하였다<sup>4)</sup>. <표 3>과 같이 모든 영역의 개념신뢰도가 0.5에서 0.95까지 그리고 분산추출지수가 0.53에서 0.69로 나타났다.

3) 본 연구에서는 이홍재·차용진(2008)이 사용한 방식처럼 측정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활용해서 구성개념 간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4)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와 분산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는 잠재요인과 측정변수 간의 회귀계수와 분산을 활용하여 개념타당성과 수렴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어 관계성의 연구에 중요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김계수, 2007: 370).

<표 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개념 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sup>5)</sup>

영역	측정문항	표준화계수	오차항 분산 (1-표준화람다 <sup>2</sup> )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Human Capital	c0503	0.838	0.298	0.952	0.689
	c0502	0.83	0.311		
	c0501	0.75	0.438		
	c0604	0.879	0.227		
	c0603	0.877	0.231		
	c0602	0.876	0.233		
	c0601	0.87	0.243		
	c0102	0.796	0.366		
	c0101	0.743	0.448		
Economic Capital	c1202	0.721	0.480	0.938	0.689
	c1201	0.843	0.289		
	c1103	0.788	0.379		
	c1102	0.857	0.266		
	c1101	0.875	0.234		
	c1003	0.816	0.334		
	c1002	0.817	0.333		
	c1001	0.806	0.350		
Cultural Capital	c0402	0.93	0.135	0.590	0.733
	c0403	0.932	0.131		
Social Capital	c0902	0.898	0.194	0.544	0.686
	c0901	0.938	0.120		
Natural Capital	c0201	0.814	0.337	0.597	0.613
	c0202	0.711	0.494		
	c0203	0.749	0.439		

5) 이론적으로 개념신뢰도는 0.7 이상, 분산 추출지수(Variance Extracted)는 0.5 이상이면 측정모형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7: 371). 본 연구에서는 산출된 관측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와 각 관측변수에 포함된 오차항을 토대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를 구하였다. 여기서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의 산출공식은

$$\frac{(\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 + (\sum (1 - \text{표준화 회귀계수}^2))]} \text{ 과 } \frac{(\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sum \text{표준화 회귀계수}^2) + (\sum (1 - \text{표준화 회귀계수}^2))]} \text{이다.}$$

영역	측정문항	표준화계수	오차항 분산 (1-표준화람다^2)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Infra Capital	c0803	0.849	0.279	0.895	0.706
	c0802	0.851	0.276		
	c0801	0.835	0.303		
	c0303	0.784	0.385		
	c0302	0.725	0.474		
	c0301	0.71	0.496		
지방행정 서비스	c0703	0.908	0.176	0.947	0.856
	c0702	0.937	0.122		
	c0701	0.93	0.135		

문화자본, 사회자본, 자연자본은 각각 개념신뢰도가 0.7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측정문항이 적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산추출지수는 0.5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신뢰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3가지 개념은 개념타당성은 다소 낮을지라도 수렴타당성은 높았다. 따라서, 개념이 추가될 필요는 있겠으나 사용된 지표는 개념에 잘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인적자본, 인프라자본, 경제적자본은 모두 개념신뢰도와 분산추출지수가 충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 각 구성개념 간 상관행렬과 분산추출지수

	Economic _Capital	Cultural _Capital	Social _Capital	Natural _Capital	Infra _Capital	Human _Capital
Economic _Capital	0.689*					
Cultural _Capital	0.545 (0.738)	0.657*				
Social _Capital	0.719 (0.848)	0.561 (0.749)	0.617*			
Natural _Capital	0.667 (0.817)	0.658 (0.811)	0.612 (0.782)	0.547*		
Infra _Capital	0.686 (0.828)	0.774 (0.88)	0.686 (0.828)	0.819 (0.905)	0.532*	
Human _Capital	0.760 (0.872)	0.748 (0.865)	0.724 (0.851)	0.817 (0.904)	0.841 (0.917)	0.690*

\* =분산추출지수; 한 셀에서 ( ) = r을 의미하며, 셀 내에서 ( ) 위의 값은 r<sup>2</sup>을 의미

판별 타당성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상관계수와 분산추출지수를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각 요인을 통해 도출된 분산추출지수가 결정계수( $r^2$ ) 보다 클 때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 타당성이(김계수, 2007: 372-373) 확보된다. 비교결과 각 결정계수가 분산추출지수 보다 높았다. 이는 각 구성개념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6개 구성요인 간 상관성이 높다는 것은 기준타당성을 만족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Pedhazur & Schmelkin, 1991).

## 2. 모형 적합성 검증: 기초모형 비교

본 연구에서는 절대부합지수, 증분부합지수, 간명부합지수의 다양한 지수를 통해 모형적합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는<표 5>와 같다. 각 가설모형 모두를 커뮤니티웰빙과 구조적모형을 설정한 후(가설모형) 각각 확인적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절대부합지수는  $\chi^2$  값, 자유도(Degree of Freedom), 유의수준(p),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GFI(Goodness-of-fit Index),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살펴보았다. 둘째로, 증분부합지수는 IFI(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or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를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간명부합지수는 PRATIO(Parsimony RATIO) 기준이 적용되었다.

<표 5> 가설모형의 모형적합도 결과

모형	$\chi^2$	D.F	Sig.	CFI	GFI	AGFI	NFI	IFI	RMSEA	RMR	PRATIO
가설1	5191.36	489	0	0.861	0.717	0.675	0.849	0.861	0.098	0.162	0.926
가설2	5287.748	489	0	0.858	0.725	0.684	0.846	0.858	0.099	0.167	0.926
가설3	5676.149	489	0	0.847	0.705	0.662	0.835	0.847	0.103	0.152	0.926
가설4	4472.959	488	0	0.882	0.756	0.719	0.87	0.882	0.09	0.147	0.924

4 가지 가설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의수준(p) 만이 수용기준에 부합하였고, 다른 지표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모형들이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4가지 가설모형을 비교한다면 간명성 지수인 PRATIO를 제외하고 가설모형 4가 모든 지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AGFI의 경우 가설모형4를 제외하고는 0.7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적합한 모형은 가설모형4로 지방행정이 커뮤니티웰빙의 다른 하위요소 간주할 때 가장 설명력이 높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설모형 4에 기초하여 커뮤니티웰빙과 지방행정서비스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 3. 커뮤니티웰빙 개념 적합도 분석: 고차요인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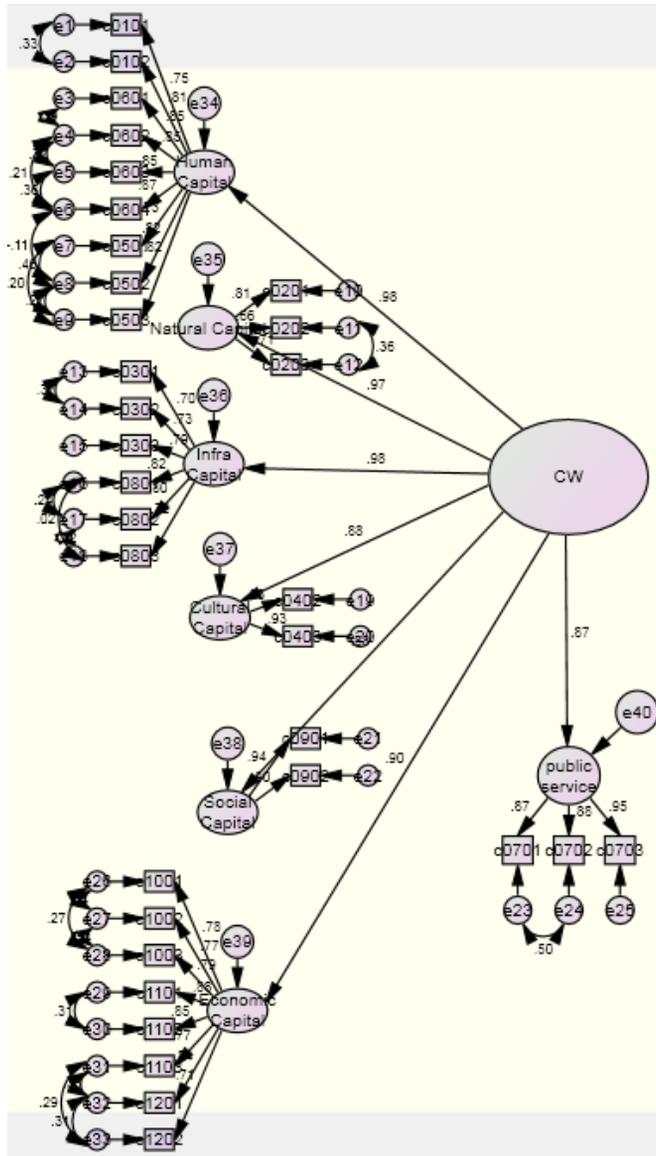
기초모형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가설모형4를 선택하였지만, 여전히 모형적합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모형을 수정하여 수렴가능한 수준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로 다룰 필요가 있다.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6>와 같다. 카이스퀘어가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으며, CFI(0.9이상)·NFI(0.9이상)·IFI(0.9이상)·RMSEA(0.8미만)는 모형기준치를 만족시켰다. 반면, PRATIO의 경우는 수렴기준치 이하로 낮아졌다. 수정과정에서 오차항 간 공분산을 잡는 과정에서 모형의 복잡성이 높아져 간명성지수는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RMR(0.1이하)과 GFI(0.9이상)는 모형적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나, 기초모형에 상당부분 수정되어 기준치에 근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수정모형은 커뮤니티웰빙과 지방행정서비스 모형의 결과를 출력하고 해석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보여진다.

<표 6> 가설모형4의 기초모형과 수정모형

4모형	$\chi^2$	D.F	Sig.	CFI	GFI	AGFI	NFI	IFI	RMSEA	RMR	PRATIO
기초	4472.959	488	0	0.882	0.756	0.719	0.87	0.882	0.09	0.147	0.924
수정	2462.237	466	0	0.941	0.86	0.832	0.928	0.941	0.065	0.116	0.883

<그림 3>은 수정모형 분석결과이다. 2차요인분석결과에서는 인적자본이 가장 부합도가 높았다(0.984). 즉,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로 가장 잘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3> 수정모형



이와 함께 인프라자본 역시 높은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었다(98%). 다음으로, 자연자본이 이들 보다는 다소 낮지만 다른 평가요소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들 세가지 자본은 커뮤니티웰빙 평가요소에도 높은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경제자본의 경우는 90.2%로 중간 수준의 부합도를 보여주었다.

〈표 7〉 커뮤니티웰빙, 지방행정서비스 및 하위영역 간 경로 유의성 검증

영역	방향	지표	차수	표준화	Estimate	S.E.	C.R.	P
커뮤니티웰빙 (CW)	→	Human_Capital	2차	0.984	1			
	→	Natural_Capital	2차	0.966	0.945	0.033	28.808	***
	→	Infra_Capital	2차	0.98	0.976	0.096	10.147	***
	→	Cultural_Capital	2차	0.881	0.989	0.032	30.852	***
	→	Social_Capital	2차	0.878	0.909	0.029	31.23	***
	→	Economic_Capital	2차	0.902	0.735	0.032	22.918	***
	→	public_service	2차	0.865	0.954	0.031	31.2	***
인적자본 (Human_Capital)	→	c0503	1차	0.825	1			
	→	c0502	1차	0.816	0.958	0.026	36.618	***
	→	c0501	1차	0.729	0.9	0.031	29.499	***
	→	c0604	1차	0.87	0.996	0.029	34.613	***
	→	c0603	1차	0.855	0.968	0.029	33.601	***
	→	c0602	1차	0.848	0.974	0.029	33.159	***
	→	c0601	1차	0.851	0.969	0.029	33.426	***
	→	c0102	1차	0.809	0.909	0.029	30.902	***
	→	c0101	1차	0.748	0.796	0.029	27.551	***
자연자본 (Natural Capital)	→	c0201	1차	0.808	1			
	→	c0202	1차	0.656	0.881	0.04	22.038	***
	→	c0203	1차	0.708	1.007	0.041	24.28	***
인프라자본 (Infra_Capital)	→	c0803	1차	0.324	1			
	→	c0802	1차	0.796	1.017	0.095	10.71	***
	→	c0801	1차	0.823	0.976	0.095	10.229	***
	→	c0303	1차	0.788	0.964	0.095	10.109	***
	→	c0302	1차	0.727	0.863	0.087	9.959	***
	→	c0301	1차	0.701	0.927	0.094	9.886	***
문화자본 (Cultural_Capital)	→	c0402	1차	0.929	1			
	→	c0403	1차	0.933	0.98	0.02	49.31	***
사회자본 (Social_Capital)	→	c0901	1차	0.94	1			
	→	c0902	1차	0.896	0.96	0.022	44.366	***
경제자본 (Economic_Capital)	→	c1202	1차	0.706	1			
	→	c1201	1차	0.838	1.175	0.039	29.92	***
	→	c1103	1차	0.771	1.082	0.039	27.56	***
	→	c1102	1차	0.852	1.159	0.046	25.407	***
	→	c1101	1차	0.876	1.252	0.048	26.129	***
	→	c1003	1차	0.786	1.099	0.047	23.608	***
	→	c1002	1차	0.774	1.043	0.045	23.267	***
	→	c1001	1차	0.78	1.041	0.044	23.435	***
지방행정서비스 (public_service)	→	c0703	1차	0.953	1			
	→	c0702	1차	0.884	0.992	0.022	44.244	***
	→	c0701	1차	0.872	0.957	0.022	42.688	***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 그리고 지방행정서비스로 나타났다. 이들은 각각 88.1%, 87.8%, 86.5%로 지방행정서비스가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부합도는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비교할 때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문화자본이 사회자본에 비해 다소 높은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인적자본과 같이 건강, 복지, 교육에 포함되거나 자연환경 및 삶을 살아가는 데 편리한 인프라가 커뮤니티웰빙을 평가하는 우선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과 같이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요소들은 상대적으로 부합도가 낮았던 것으로 볼 때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지방행정서비스는 어느 자본의 하부요소는 아니었으나, 커뮤니티웰빙의 6개자본요인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티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나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함을 의미한다.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적자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85%수준의 부합도를 보인 평가지표로는 전반적 복지서비스 평가(c0604: 87%), 보육지원서비스 평가(c0603: 85.5%), 장애인서비스 평가(c0602: 84.8%), 노인서비스 평가(c0601: 85.1%)이었다. 전반적인 복지수준은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 가장 부합하며, 보육지원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노인서비스 등이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로 높은 부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커뮤니티웰빙과 지방정부는 육아 및 장애인, 그리고 노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뜻한다. 80%이상에서 85% 수준에 포함된 평가지표로는 교육환경 평가(c0503: 82.5%), 평생교육서비스 평가(c0502: 81.6%), 의료서비스 평가(c0102: 80.9%)로 나타났다. 교육과 의료 등은 중요하지만, 인적자본요인에서 상대적으로 차상위 수준으로 간주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지표는 공공도서관 평가(c0501: 72.9%), 지역건강상태 평가(c0101: 74.8%)로 나타났다. 지역건강상태나 도서관 등은 인적자본의 지표이지만 다른 지표들에 비해 적합도가 낮아 상대적 중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연자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85%수준의 부합도를 보인 평가지표는 없었으며, 80% 이상인 측정지표로 쓰레기처리 서비스 평가(c0201: 80.8%)가 있었다.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쓰레기 처리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70%이상의 측정지표로는 공원·녹지 공간(c0203: 70.8%)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가장 낮은 지표로는 공기오염에 대한 평가(c0203: 65.6%)로 나타났다. 자연자본의 측정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주변환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쓰레기 처리의 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주변녹지 및 대기환경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환경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향후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따라 녹지 및

공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인프라자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85%수준의 부합도를 보인 평가지표는 없었으며, 80%에 근접하는 측정지표로 자연재해 안전 수준 평가(c0801: 82.3%), 치안수준 평가(c0802: 79.6%), 도로상태 평가(c0303: 78.8%)가 있었다.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수준과 치안 등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역인프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때 사람들은 커뮤니티의 웰빙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교통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질이나 웰빙의 요소로 증시되고 있음을 도로상태 평가 부합도는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서비스 평가(c0302: 72.7%), 대중교통 평가(c0301: 70.1%)는 인프라 자본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넷의 경우 한국은 이미 초고속 통신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중교통이 도로상태에 비해 평가지표로서 부합도가 낮은 이유는 서울의 경우 자가 이용률이 높고 이때 도로의 상태가 더 많이 부각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중교통을 지하철과 버스로 크게 구분한다면 서울은 지하철의 경우는 많은 노선이 구축되어 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버스 역시도 노선 및 정거장에 대한 개선이 잘 이루어져왔기에 인프라자본으로서 수준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수준에도 이것이 커뮤니티웰빙과 관련될 때 그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와 달리 경찰인력 평가(c0803: 32.4%)는 인프라 수준에 매우 낮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인프라자본의 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민들은 단순히 경찰인력이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프라자본의 지표로서 경찰인력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의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자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문화자본을 나타내는 두 개의 척도가 모두 90%를 넘기고 있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수준 평가(c0402: 92.9%),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평가(c0403: 93.3%)는 부합도가 매우 높고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두 개의 지표가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로서 문화자본을 설명하는데 매우 적합함을 의미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표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문화자본에 부합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회자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사회자본을 나타내는 두 개의 척도가 모두 높은 부합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차이가 났다. 지역사회활동 평가(c0901: 94%), 자원봉사활동 평가(c0902: 89.6%)로 나타났는데, 지역사회활동 평가는 95%수준이었고, 자원봉사활동 평가는 90%수준이었다. 사회자본으로서 시민참여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사회활동이 우선이며, 다음으로 자원봉사가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둘 모두

90%이상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두 지표는 사회자본의 평가지표로서 매우 적합하다. 그럼에도 사회자본 역시 문화자본과 같이 평가지표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표들 특히, 개인 및 사회 간 관계(지역신뢰, 대인신뢰) 등에 대한 척도를 추가한다면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지표로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섯째, 경제자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85%수준의 부합도를 보인 평가지표로는 지역 재정규모 평가(c1101: 87.6%), 지역 예산 운용 평가(c1102: 85.2%)였다. 지역재정규모는 경제자본에서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 가장 부합하며, 지역 예산운영 평가 역시 경제자본 및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로 높은 부합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자본에 대해 시민들은 개인 고용에 대한 부분 보다 커뮤니티웰빙 자체가 지자체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적합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시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삶은 대부분은 개인 소득수준으로 바라봐 온 경향이 많았는데, 커뮤니티웰빙은 지역재정이 중요한 지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는 삶에 대한 시각, 웰빙에 대한 시각들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80%이상에서 85% 수준에 포함된 평가지표로는 전반적 경제적 상황 평가(c1201: 83.8%)로 확인되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웰빙이 나타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경제상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겠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표로는 납부세금 평가(c1103: 77.1%), 개인 일자리 평가(c1003: 78.6%), 실업자 지원정책 평가(c1002: 77.4%), 특히 지역 생활비 평가(c1202: 0.706)로 확인되었다. 커뮤니티웰빙을 위해서 재정적인 확충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용과 편익 중 편익에 더 많은 기대감이 존재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일자리와 실업자 지원정책의 경우 실업률을 해소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지표이지만 이것이 커뮤니티웰빙에는 덜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각 커뮤니티마다 다를 수 있고, 대도시권에 비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가 그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커뮤니티웰빙의 평가요소로서 경제자본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인소득과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서비스의 경우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세 가지 지표 모두 85% 이상의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었으며, 전반적 공공서비스 평가(c0703: 95.3%)의 경우에는 95%의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지역 공무원 업무처리 공정성 평가(c0701: 87.2%), 지역 공무원의 업무태도·서비스 평가(c0702: 88.4%)는 각각 85%의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어 적합한 지표로 간주된다. 다만, 2가지 지표가 공무원의 행태와 관련된 지표라는 점에서 지방행정서비스의 업무방식 또는 조직차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표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커뮤니티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는 6가지 자본요인과 지방행정서비스로 구현

될 필요가 있으며, 각 평가소요에 대한 세부지표 또는 측정항목은 대부분 적합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가지 자본요인과 지방행정서비스를 합한 7가지 평가요소 간에도 부합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던 만큼 이들 간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향후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7가지 요소 내부의 측정항목 간 양적 수치의 차이가 나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들의 하위요소 또는 지표로 고려되는 것 보다는 하나의 평가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평가모형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에 기초할 때 더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V.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지방행정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과 개념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점(서재호·김혜정·이승중, 2012: 48)과 커뮤니티웰빙은 이론적으로 6가지 자본요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Kee et al., 2014) 사이에서 지방행정서비스는 어떤 구성요소의 하위요소로 고려되어야 할지 아니면 특별한 하나의 평가요소로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출발하였다. 즉, 잘 구현된 지방행정서비스는 지역주민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며, 지방정부 선호도를 높이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행정서비스를 평가요소로서 커뮤니티웰빙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분석결과 몇 가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경쟁가설로 제시한 인프라자본의 하위요소(H1), 사회자본의 하위요소(H2), 인적자본의 하위요소(H3), 커뮤니티웰빙의 다른 평가요소(H4) 중에서 H4 가설이 모형적합도에서 가장 우수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프라를 구성하고, 지역민의 건강에 대한 복지정책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관계 회복과 지역회복(ex: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위해 지방행정서비스가 노력할지라도 지방행정서비스는 단순히 이들의 하위요소라기 보다는 각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체로서 하나의 평가요소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커뮤니티웰빙은 지역개발과 발전에 있어 현재 가장 중시되고 있는 웰빙과, 지역민의 행복, 그리고 삶의 질을 포함하는 패러다임이기에 지역평가를 위한 평가틀로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지방행정서비스는 커뮤니티웰빙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이들을 반영하는 다른 차원의 평가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차요인분석 결과에서 인적자본, 인프라자본, 자연자본, 경제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경제자본은 과거 성장주의 관점에서 중시되어온 웰빙의 요소

이며, 인적자본은 성장으로 인해 파생된 형평성과 건강, 그리고 교육 등을 나타내는 요소이다. 즉, 여전히 과거의 웰빙에 관점에서 중시되던 요소들이 현재 또는 커뮤니티웰빙에서도 주요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높은 적합도를 보인 자연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우는 지역의 쾌적한 삶과 관련된 물리적 지표들이다. 즉, 인적자본과 경제자본만으로 웰빙을 국한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가지표로서 이들은 균형적으로 다루어지고 각각의 관점을 담아내야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의 경우는 최근 한류열풍이나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다소 의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자본요인은 공동체 구성원 또는 커뮤니티 구성원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공간을 형성해주는 하나 다른 요인들에 비해 일상적인 삶과 간접적인 관계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임에도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낮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웰빙을 평가하기 위한 6가지 자본요인과 지방행정서비스 요인의 하위지표들은 대부분 적합한 수준이었다. 물론, 6가지 자본요인과 지방행정서비스를 합한 7가지 평가요소 간에도 부합도의 차이가 나타나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는 있기에 이들 간 상대적 가중치에 대한 향후 연구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상기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 역시 존재한다. 우선, 구성개념과 측정항목들 간에 양적·질적 균형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커뮤니티웰빙이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개념이며, 그 구성요소도 이와 함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덜 다듬어진 지표들이 포함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개념과 지표의 검토를 통해 각 구성요소 간 균형과 지표의 양적·질적 균형을 확보할 때 평가지표에 대한 검증이 타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지역 각 수준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응답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적합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현재 모습과 더 적합한 요소들을 규명할 수는 있으나, 커뮤니티웰빙이 현 시점보다 미래시점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중요도를 질의하는 설문을 구성하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한 절차와 자료가 수집된다면 커뮤니티웰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고려해야 할 모습을 확인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인호·이계만·신영순. (2013). 도시발전을 위한 창조도시 발전전략 접근의 유용성.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 195-216.
- 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연구를 위한 국제지표 분석: 한국적 함의의 도출. 『지역발전연구』, 22(1): 1-35.
- 김계수. (2007). 『Amos 16.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
- 권경득. (1997).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평가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 1(2): 71-92.
- 박도영. (2006). 학습자특성에 대한 고차 확인적 요인분석. 『교육평가연구』, 19(1): 285-304.
- 배귀희. (2011).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 개념 구성에 관한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2): 199-227.
- 서재호·김혜정·이승종. (2012). 지방정부의 가치지향으로서 커뮤니티 웰빙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6(1): 33-56.
- 이배영·전진석. (2009). 지식관리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 75-98.
- 이승종·기영화·김윤지·김남숙. (2013).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 연구: AHP 기법의 적용. 『한국행정학보』, 47(2): 313-337.
- 이화경. (2002). 공공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2(6): 3-49.
- 이홍재·차용진. (2008).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추진 평가모형에 대한 고찰: 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4): 69-92.
- 최병대. (2001). 시민(주민) 중심의 지방행정 서비스 공급체제 구축: 시민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원 신년특별논단: 52-68.
- 최창수. (2000).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미국의 교훈. 『지방행정연구』, 14(1): 213-230.
- Box, Richard C. (1998). *Citizen Governance: Leading American Communities Into the 21st Century*. Thousand Oaks, CA: Sage.
- Campbell, A. (1974). *Quality of life is a Psychological Phenomenon*. in B. Strumpel (ed). *Subjective Elements of Well-Being*, 9-19. OECD.
- Chanan, G. (2002). *Measures of Community: A Study for the Active Community Unit and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Unit of the Home Office. London: Development and Statistics Unit of the Home Office.

- Cuthill, M. (2002). Coolangatta: A portrait of Community Well-being. *Urban Policy and Research*, 20(2): 187-203.
- Christakopoulou, S. Dawson, J., & Gari, A. (2001). The Community Well-being Questionnaire: Theoretical Context and Initial Assessment of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6: 321-351.
- Florida, Richard. (2002).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Basic Books.
- Fitzgerald, M. R., & Durant, R. F. (1980). Citizen evaluations and urban management: service delivery in an era of prote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0: 585 - 594.
- Goldsmith, S., and W. Eggers. (2004). *Governing by Network: The New Shape of the Public Secto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Kee, Youngwha., Yunji Kim, and Rhonda Phillips. (2014). *Community Wellbeing: Learning in Communities*. Springer Briefs Series. (2014 forthcoming)
- Kee, Youngwha and Namsook Kim. (2012). Development of New Indicators to Measure Community Well-being. *Discovering new frontiers in Quality-of-Life research*. 2012-XI-ISQOLS CONFERENCE.
- Kusel, J. (1991). *Well-being in Forest-dependant Communities*. CA: Forest and Rangeland Resources Assessment Program and California Department of Forestry and Fire Protection. Berkely.
- Kruger, P. Stefan. (2010). Wellbeing-The Five Essential Element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6(3): 325-328.
- Lee, Seung Jong., Yunji Kim, and Rhonda Phillips. (2014). *Community Well-be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Conceptions and Applications*. Springer Briefs Series. (2014 forthcoming)
- Pedhazur, E. J., & Schmelkin, L. P. (1991). *Measurement, design, and analysis: An integrated approach*. Hillsdale, NJ: Erlbaum.
- Ramsey, D. & Smit, B. (2002). Rural Community Well-being: Models and Application to Changes in the Tobaccobelt in Ontario. Canada. *Geoforum*, 33: 367-384.
- Scottish Development Center. (2007). *Developing Social Prescribing and Community Referrals for Mental Health in Scotland*. Healthier Scotland Scottish Government.
- Veenhoven, R. (2004). *Happiness as an Aim in Public Policy, in Positive Psychology in Practice*. John Wiley and Sons, Inc. N.J., USA.

- White, S. C. (2008). *But What is Wellbeing? A framework for Analysis in Social and Development Policy and Practice*.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 Wiseman, J. (2008). *Community Wellbeing in and Unwell World: Trend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김 태 훈:** Syracuse University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고, 숭실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안정행정부 안전문화팀장을 거쳐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기획부장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노인복지, 보육정책, 문화정책 등이다(hanbyolkim@hanmail.net).

**서 인 석:**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에서 2013년 “국회입법과정에서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1년 한국행정학회에서 주관하는 Travel Grant 지원사업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사회 및 복지 분야의 정책분석, 정책평가, 연구방법론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거래비용관점에서의 정부실패와 공직부패와의 관계(2012)”,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2013)”, “정책유형과 정책대상집단에 따른 정책결정 소요시간 연구(2013)” 등 이외에 행정학보, 정책학회보, 행정연구 등 국내 유수의 학술저널에 연구물을 게재하고 있다(inseok800414@naver.com).

**기 영 화:** Ph. D,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논문: A Study of Adult Education Needs of Korean Americans: Barriers to Participation, 1993)를 취득하고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커뮤니티웰빙, 공무원HRD, 노인인력개발이며, 관련논문으로는 “커뮤니티웰빙 지표에 대한 공무원과 전문가의 평가비교연구: AHP 기법의 적용”(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2013), “Educational gerontology in Korea: an interpretive and critical study”(2010) 등이 있다(key@ssu.ac.kr).

